

것으로 기대됐다.

문 후보는 대선 공약집에서 다문화정책으로 ▲결혼이민자 정착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종합지원체계 확립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 및 정서 지원을 위한 '생활-학습 돌봄 멘토링 사업' 실시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별학급과 대안학교 지원, 다문화 교육에 대한 교과 개발 및 교사 연수 실시 ▲국민 대상 다문화 수용성 교육 내실화 및 확대 등 4가지를 들었다. 이와 별도로 농업정책 분야에서 '이주여성 농어업인 후견인제 등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확대'도 약속했다.

정부는 2018년부터 5년간 추진할 제3차 다문화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하면서 '차별 없는 다문화 사회 구현과 다문화가족의 참여 확대'란 목표 아래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참여를 늘리고 사회적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정책위원회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 범죄

### ■ '어금니 아빠'의 추악한 범죄 행각...이영학 사건 충격

희소병 딸을 돌보는 사연이 알려지며 많은 이들의 동정을 받았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이 딸과 공모해 여중생인 딸 친구를 추행하고 살해한 사실이 밝혀져 세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 씨는 얼굴뼈가 계속 자라는 희소병인 '거대 백악종'을 앓아 수술을 거듭한 끝에 치아 중 어금니만 남았다. 딸도 같은 병을 앓는다는 사실이 2006년 12월 방송을 통해 알려지자 전국적으로 성금 운동까지 벌어지며 화제를 모았다.

이 씨는 9월 30일 낮 12시20분께 딸을 통해 피해자 A(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추행하고, 다음날인 10월 1일 A양이 깨어나 저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했다. 시신을 강원도 영월군 야산에 버린 뒤 서울 도봉구의 한 은신처에 머물던 이 씨는 10월 5일 경찰이 검거를 위해 진입을 시도하자 죽을 목적으로 딸과 함께 수면제를 과다 복용했다.

그는 "성적 욕구를 해소할 목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집에 놀러오던 딸 친구를 대상으로 정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아내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등의 추가 범행 사실도 경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이영학의 부인 최 모 씨는 범행에 앞선 9월 6일 망우동 집에서 투신해 숨졌다. 이 씨는 부인 최 모 씨가 살아 있을 당시 오피스텔을 빌려 고객을 모은 뒤 최 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후원금과 보조금으로 월 1천만원을 카드 값으로 쓰고, 외제차를 구입해 타고 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씨의 계부 배 모(60) 씨가 8년간 최 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는 의혹도 있었으나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배 씨가 자살해 진상을 밝힐 수 없게 됐다. 배 씨는 유서에서 경찰에 "누명을 벗겨 달라"고 호소했다.

경찰은 이영학이 부인 최 씨의 사망 과정에 개입한 의혹도 수사했으나 폭력과 성매매 강요에 지친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최 씨가 투신 직전 이 씨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해 혐의를 추가했다.

사건 발생 초기 부실 대응으로 피해자를 구할 골든타임을 놓친 경찰은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A양 실종신고를 받은 중랑서 망우지구대 경찰관은 A양 어머니를 상대로 A양의 행적 등을 조사하지 않았다. 또 A양 어머니가 지구대에서 이 씨의 딸과 통화하는 것도 귀담아듣지 않아 핵심 단서를 확인할 기회를 놓친 것으로 감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중랑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직원 2명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지구대와 함께 수색하라'는 112상황실 지령을 받고도 "출동 하겠다."고 허위보고한 뒤 사무실에 머물렀다. 이들은 감찰 조사에서 "대수롭지 않은 사건이라고 판단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사건 이후 실종사건 발생 초반부터 범피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실종자 수색과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실종사건 수사체계를 개선했다.



▲여중생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피의자인 이영학이 10월 13일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경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 연세대 대학원생, 교수에 불만 품고 '텀블러 폭탄' 제조

6월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제공학관 기계공학과 김 모(46) 교수 연구실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김 교수가 목과 가슴, 손, 오른팔 등에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폭발을 일으켰다는 종이상자와 내용물을 수거해 감식한 경찰은 작은 나사 수십 개와 화약이 들어 있는 텀블러를 기폭장치와 연결해 만든 사제 폭발물 형태의 물체로 판단했다.

경찰은 당일 오후 김 교수 소속 학과 대학원생 김 모(25) 씨를 용의자로 긴급 체포했다. 김 씨는 평소 연구지도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있을 때마다 심하게 질책하던 김 교수에게 반감이 있었고, 논문 작성과 관련해 크게 꾸중을 들은 뒤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5월 중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폭탄테러 사건'의 범행 수법에 착안해 폭발물을 제조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김 씨에게 형법 제119조 폭발물 사용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텀블러 폭탄을 '폭발물'이 아닌 '폭

발성 물건'으로 보고 형법 제172조 폭발성 물건 파열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에서 김 씨 측 변호인은 "털블러에서 폭발 작용은 없었고 화약 연소 작용만 있었다."고 주장하며 단순 상해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연세대는 사건 직후 일반대학원장 등 고위 관계자들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사태를 수습하고 연구 환경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 ■ 용인 일가족 살해사건...뉴질랜드서 범인 검거해 송환

한 30대 남성이 재가한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어머니와 일가족을 살해한 뒤 돈을 빼내 뉴질랜드로 도피했으나 결국 현지에서 체포돼 송환됐다.

10월 25일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A(55·여)씨와 아들인 B(14)군이 흉기에 찔린 채 안방 베란다 쪽에 숨겨 있는 것을 A씨의 여동생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의 남편도 강원도 횡성군의 한 콘도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트렁크에서 흉기에 찔린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CCTV를 통해 A씨의 장남 김성관(35) 씨가 같은 달 21일 낮 12시께 사건 현장인 아파트에 들어갔다 나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경찰은 김 씨가 A씨와 경제적 갈등을 빚었다는 주변인 진술, 그가 같은 달 23일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뉴질랜드로 출국한 사실 등을 토대로 김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한편, 뉴질랜드 경찰에 공조수사를 요청해 신병 확보에 나섰다.

김 씨는 뉴질랜드에서 2015년에 저지른 절도 혐의로 체포됐다. 한국과 뉴질랜드 당국은 김 씨 송환 절차에 착수해 2018년 1월 김 씨를 한국으로 송환해 구속했다. 김 씨의 아내 정 모(32) 씨는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정 씨는 처음에는 남편의 범행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경찰 조사에서 범행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남편의 거짓말에 속아 범행에 개입했다고 말을 바꿨다.

### ■ 전국서 10대 집단폭행 범죄 잇따라... '소년법 개정' 여론 북음

부산 여중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진이 9월 3일 '부산 사하구 여중생 집단 특수 상해'라는 제목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와 급속도로 퍼졌다.

SNS 대화방을 캡처한 사진 속에는 피투성이가 된 여성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사진을 대화방에 올린 가해자가 대화 상대에게 "심해?" "들어갈 것 같아?"라며 자신의 처벌 수위를 걱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9월 1일 오후 10시30분께 부산 사상구 한 공장 앞 도로에서 신고된 '여중생 폭행 사건'이 해당 SNS 속 사진과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당시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폭행으로 입안과 뒷머리 쪽이 찢어진 여중생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가해자는 같은 또래 여중생들로 밝혀졌다. 사건 당일인 1일에 2명이 지구대를 찾아와 자수한 데 이어 경찰 수사 과정에

미성년자 특례조항		
만 18세 미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만 10세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형, 무기징역형 해당 범죄: 징역 15년</li> <li>살인 등 특정강력 범죄: 최장 징역 20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형사처벌하지 않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 형사적 책임 지지않음</li> </ul>
<b>민주당 이석현 의원</b> 형사 미성년자 최저 연령 현행 만 14세 → 만 12세	소년부 보호사건 심리 대상의 범위 현행 만 10~14세 → 만 10~12세	법정 상한형(특강법*) 현행 20년의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의 징역 →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방안
<b>바른정당 하태경 의원</b>	소년법 적용 연령 현행 19세 미만 → 18세 미만	소년법 최대 유기징역형 (소년법 개정안: 소년형악법죄처벌강화법) 현행 징역 15년 → 징역 20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자료/법무부 및 각 의원   연합뉴스		

서 2명이 추가로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가운데 2명은 피해 여학생이 2개월 전 폭행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중생을 1시간 40분 동안이나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 병 등으로 100여 차례 폭행하고 이후 보복 폭행까지 저질렀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가해자들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일부 누리꾼은 "신상털기를 통해 가해자 이름과 학교, 사진 등을 퍼뜨리기도 했다.

부산 사건이 논란이 되자 그에 앞서 강원도 강릉에서 여고생 등 10대 6명이 평소 어울려 지내던 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 충남 아산에서 10대들이 여중생을 감금하고 '조권만남'까지 강요한 사건 등이 수면으로 올라와 청소년 폭력범죄의 심각성이 화두로 등장했다.

경찰의 부실한 사건 대응과 청소년 범죄에 관한 제도적 한계도 도마 위에 올랐다. 부산 사건과 같이 2차 폭행이 1차 폭행에 대한 보복성으로 이뤄진 경우엔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그러나 경찰은 2차 폭행 발생 직후 범행 동기를 정확히 조사하지 않은 채 "가해자들이 피해자 태도를 못마땅하게 생각해서"라고 언론에 발표해 피해자 학부모로부터 반발을 샀다. 가해자 중 2명이 과거 범죄 전력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상태에서 또 범죄를 저질렀으나 경찰이 소년법의 보호관찰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없어 사안의 긴급성을 일찍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제도적 미비점도 지적됐다.

이들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미성년자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규정한 소년법 폐지 요구가 빗발쳤다. 정치권에서도 10대 청소년들의 범죄 양상이 잔혹해지는 점을 고려해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청와대는 소년법 관련 국민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에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엄벌하라는 국민 요청은 정당한 측면이 있다. 다만 사건별·당사자별로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낮추면 해결된다.'는 생각은 착오"라고 설명했다.

또 “진짜 해결 방법은 소년법에 있는 열 가지 보호처분을 활성화·실질화·다양화해서 소년원에 들어간 어린 학생들이 사회로 제대로 복귀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소년법 개정이 당장의 해결책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 ■ 삼성·한진그룹 총수 자택공사비, 회삿돈으로 유용

국내 굴지의 재벌그룹이 회삿돈을 빼돌려 총수 일가의 자택 공사비로 쓴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과거 특검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삼성그룹의 차명계좌도 경찰 수사를 통해 수면으로 떠올랐다.



▲자택공사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삼성물산을 압수수색한 10월 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성물산 건설부문 본사에서 경찰청 특수수사와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들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근희 삼성그룹 회장 등 삼성 일가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종로구 평창동 자택 수리비용이 법인자금을 빼돌린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대기업 회장 여러 명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던 한 업체의 세무비리 행위가 해당 대기업들의 회삿돈 유용과 관련됐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 확인에 나섰다. 개인 돈으로 지출해야 할 개인 자택 공사비를 회삿돈으로 충당했다면 배임죄에 해당한다.

조양호 회장은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던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공사비용 65억~70억원 가운데 30억원가량을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를 받았다.

대한항공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등을 거쳐 사실 관계를 파악해 가던 경찰은 회삿돈 유용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한진그룹 건설고문 김 모 씨를 구속한 데 이어 ‘윗선’으로 지목된 조 회장 부부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9월 19일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경찰은 그간 확보한 관련자 진술과 기록 등을 검토한 끝에 조 회장과 그룹 시설담당 조 모 전무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며 영장을 돌려보냈다.

경찰이 영장을 재신청하자 검찰은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

각했고 이에 경찰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검·경 간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결국 경찰은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삼성그룹과 관련한 수사에서, 경찰은 이근희 회장 등 삼성 총수 일가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를 삼성물산 법인자금으로 대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이 회장과 삼성물산 임원 B씨, 현장소장 C씨를 입건했다. 이들은 2008~2014년 삼성 일가 주택 수리비용 가운데 30억원을 삼성물산 자금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2008년 삼성특검 당시 확인되지 않은 4천억원대의 그룹 차명계좌를 찾아내 이 회장 등 관련자 2명을 조세포탈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 회장과 그룹 미래전략실 소속이었던 자금 담당 임원 A씨가 임원 72명 명의로 차명계좌 260개를 개설해 자금을 관리하면서 2007~2010년 이 회장이 내야 할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82억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계열사 자금 등 회삿돈을 비지금으로 빼돌린 횡령 및 배임의 개연성도 염두에 두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이 금융실명제법 위반 공소시효 5년이 지나 의미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해 수사는 진전되지 못했다.

## 사건·사고

### ■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29명 사망

12월 21일 오후 3시 53분께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스포츠센터 두손스포리움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2008년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40명 사망) 화재 이후 9년 만에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화재 참사였다.

화재 원인은 1층 주차장 천장에 설치된 보온 등의 축열(과열) 또는 전선의 절연 파괴로 인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됐다. 불은 주차장 내 차량 15대와 외부 차량 1대 등 16대에 동시다발적으로 옮겨붙었다. 이어 불과 4~5분 만에 화염과 유독가스가 건물의 모든 층으로 번졌다.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는 밸브가 차단돼 작동하지 않았고, 잠금 상태로 꽉 닫혀 있던 배연창은 연기 배출을 막아 희생자들의 질식사로 이어졌다. 가장 많은 사망자(20명)가 발생한 2층 여성 사우나의 비상구 통로가 선반으로 가로막혀 있는 등 총체적 관리 부실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방시설 안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져 이 같은 문제점을 사전에 제거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화재 당시 소방차량이 신고 접수 7분 만에 현장 인근에 도착했으나 불법주차 차량에 막혀 500m가량을 우회하느라 진화작업이 14분이나 늦어졌다. 화재 당시 스포츠센터 앞에 4대, 측면에 11대, 진입로에 6대 이상의 차량이 불법 주차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화재 진압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소방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불법 주차 문제의 심각성과 관련 입법 미비가 다시 화두에 올랐다.